

[기획]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한미 FTA 비준절차 어떻게 되나요?

美의회 비준은 어떻게?

6월까지 협정체결... 국회동의 거쳐야 효력 발생

한·미 FTA(자유무역 협정)가 타결된 지난 2일 이후 이를 반대하는 한 단체가 거리시위를 벌이면서 '국회비준 결사반대'라는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는 '국회 비준'이 아니라 '국회 비준 동의'라는 게 법학자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는 비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원수나 그를 대신한 정부책임자가 중요한 비준을 하기 앞서 동의를 해주는 기관입니다.

1 비준이란 무엇인가요?

비준(批准)이란 '전권'(full power)을 가진 정부 대표자가 체결·서명한 타국과의 조약을 조약체결권자인 국가원수 또는 내각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동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현대 각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조약의 체결·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헌법 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講和)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명된 조약에 대하여 비준권자가 반드시 비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극히 드물기는 하였으나 대통령이 내각 수반이 비준을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준은 모든 조약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중요하지 않은 조약, 즉 부속협정·교환경문·잠정협정·행정협정 등에는 비준이 필요 없습니다.

국제법상 조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약의 성립, 즉 비준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2 비준동의 어떤 때 필요한가요?

현대사회에서 민주국가의 헌법은 대부분 중요 조약의 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뒷모습 왼쪽)과 김종훈 수석대표 등 한미FTA협상 대표단이 한미 FTA 타결 뒤인 지난 6일 국회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 대책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협상결과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가원수에게만 결정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대의민주주의 원칙 때문이지요.

이렇게 2중장치를 두는 이유는 조약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데 있음은 물론입니다.

또는 입법사화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 1항)

이렇게 2중장치를 두는 이유는 조약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검토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데 있음은 물론입니다.

한미 FTA는 이제 정식 체결과 국회 비준동의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협정체결은 6월 말까지로

3 한미 FTA 어떻게 비준하나요?

한미 FTA는 이제 정식 체결과 국회 비준동의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협정체결은 6월 말까지로

처리시한이 있지만, 시한이 없는 국회 비준 동의안은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간 주요사안 협상이 있어 타결과 체결은 다릅니다.

한미 FTA는 지난 2일 타결단계를 마쳤고 이후 법률검토와 조문화 작업을 거쳐 5월 중순쯤 협정내용을 일반에 공개한 뒤, 6월 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양국 대표가 협정문에 서명을 하면 정식

체결됩니다. 이후 정부는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데 현재로서는 9월 정기국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준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농촌지역구 의원들까지 가세한 정지권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구나 비준시한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데다 5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가 적극적으로 처리에 나설지도 의문입니다. 때문에 한-칠레 FTA가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1년4개월이 걸렸던 만큼 한미 FTA도 18대 국회로 넘어가서야 효력이 발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미 FTA는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외조약이기 때문에 헌법조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비준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반대단체들이 국회비준동의과정에서 이를 무효화 시키겠다고 버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동의안이 부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한-칠레 FTA나 이라크 파병 동의안 같이 국민들간 찬반이 격렬하게 갈린 대외협약들의 경우에도 크나큰 진통은 겪었지만 지연정결 국회가 비준에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만약 한 국가의 합법정부가 타결한 조약에 대해 국회가 비준을 안 해주면 그 정부는 이후 대외적 신뢰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물의를 빚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 이론적으로 비준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한미FTA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비준될 수도 있습니다

협정문 최종안 상정후

45일 이내 의무 처리

野, 의회 장악 비준 함로

대통령은 FTA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국내법 개정 사항을 협정서명후 60일 이내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비준 절차=대통령은 먼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협정문과 국내 이행법안 초안을 패키지 형태로 마련, 상·하원에 보낸다.

의회에서는 초안의 경우 모의투표와 행정부와 수정협의 등 정해진 기한없이 무기한으로 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종안이 상정되면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하고 통과 마감시한도 45일밖에 남지 않는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45일 이내에 최종안을 본회의로 이관해야 하며 45일 경과시에는 최종안이 자동적으로 상정되기 때문이다.

하원이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면 45일 이전이라도 상원에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하원에서 최종안이 상원보다 먼저 통과되면 상원은 이를 이관 받은 후 15일 이내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회의 표결=본회의 토론은 20시간으로 제한, 수정없이 찬반 표결로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표결은 상원에서 마지막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원은 하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시행=FTA의 법적인 효력은 협정문에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양국 의회가 모두 비준동의한 60일 후부터 발휘된다.

Very Good Tour advertisement for various travel packages including Japan, Europe, and domestic tours. Includes contact info: 1588-7557.

Travel agency advertisement for 'Ancheon' (안천출발상품) featuring various international and domestic tour packages.

Travel agency advertisement for 'Daeryung' (대양주) featuring various international and domestic tour packages.

Travel agency advertisement for 'Ulyep' (유럽) featuring various international and domestic tour packages.

Travel agency advertisement for 'Mizoo' (미주) featuring various international and domestic tour packages.

Small print text at the bottom of the page containing legal disclaime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travel agencies.